

여 “재발 방지법 조속 처리”...야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정치권, 이태원 참사 1주년 책임·입법 과제 놓고 공방 국힘 “책임 미루지 않겠다” 민주 “누구에게 책임 물었나”

이태원 참사 1주년인 29일 여야는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모두의 비극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며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는 안이한 안전 대책과 미흡한 초동 대처, 미흡한 현장 대응, 보고 체계의 붕괴와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안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쏟아져 사표 던지고 싶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조현장에 지각하면서도 VIP(대통령) 동행 파악에 비뚤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특수수사 과정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년이 지났지만 뻔뻔하게 책임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임자들을 보자면 인면수심(人面獸心)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정치집회”를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손가락질하는 국민의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또 그날의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한다”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9일 이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태원 1주기 추모식 대신 추도예배 참석

“지난해 오늘, 저에게 가장 슬픈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

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일, 6년만에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재개

한일 정부가 한미일 3국의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개최를 앞두고 6년만에 양자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회를 열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장과 카즈야 엔도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한일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한일이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2017년 제18차 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한일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정책공조와 공동 협력사업 모색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정보기술(IT)·디지털 분야에서 우선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앞으로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한일은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코로나때 선지급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안한다

당·정·대 고위 협의회서 결정 57만명 8000억원 부담 면제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

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은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여권은 설명했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지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가계 부채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비드본드 등의 활용

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커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도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별보증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금 목표를 넘겨도 지원에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재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렘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방역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방·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30

지스트 1993-2023
미래를 그리다
New Dream, Great GIST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베이스캠프,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1. 1. AI4Good Forum | 08:30-17:30
(AI기술-정책 글로벌 전문가 토론회 + AI정책전략대학원 비전선포식)

11. 2.~ 3. GIST-MIT Symposium | 09:00-11:50

11. 2.~ 12. 27. GIST 오름아트홀 이조흥 초대전 (Universe)

11. 7. 사회공헌 아카데미 이국종 교수 강연 (꿈의 시작) | 19:00-20:00

11. 10. 투자유치 IR 대회 + 스타트업 나이트 | 12:00-22:00

11. 14. 지역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Healing) | 19:30-20:30

11. 15. GIST International Day(주한대사관 초청 행사 등) | 16:00-19:00

11. 16.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 14:00-16:10

11. 27. Global Lecture Series(2회/Malte C. Kaluzna 교수) | 11:00-12:00

설립 30주년 기념 11월 주요 행사

📍 **오름관**